

당정, 세종 행정수도 완성·수도권 공급 확대 입법 추진

국토교통위-국토부 당정협의
내년 서울에 남은 5개 부처 이전 등
민주, 다른 법안보다 우선 처리 의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이 28일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임명 후 첫 당정협의회를 열고, 행정수도특별법·행복도시특별법을 국정감사 이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수도권 부동산 공급을 지원할 도시정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도 처리하기로 했다.

복기왕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국토교통부 당정협의 후 기자회견과 만나 “홍지선 장관 임명 후 첫 당정협의회를 갖고 11월에 추진할 예산과 법안 관련해서 논의했다”고 말했다.

복 간사는 “특히 강조했던 것은 행정수도특별법과 행복도시특별법”이라며 “행정수도특별법은 행정수도의 위상을 세종으로 규정하는 내용이고 행복도시특별법은 서울에 있는 5개 부처를 내년부터 완전히 이전시키는 과제를 담았다. 당정이 최우선적으로 추진한다는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국토교통부 당정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복 간사는 해당 법안 추진에 야당의 이견이 없다는 질문에 “거친 바다를 출항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0년 묵은 과제인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세종으로 다 가야 한다’는 의견이 있고 ‘부처는 가도 대통령실은 안 된다’는 의견도 있다”며 “여야를 가리지 않고 폭넓게 의견을 들어 가면서 여야 합의로 법안 처리를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그 밖에 다른 법안을 다루지 않을 것”이라며 “20년 묵은 국가 과제를 이번에 풀고 가겠다”며 의지를 드러냈다.

민주당은 공공 재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해 용적률을 최대 1.3배까지 건축할 수 있게 높이는 내용의 도시정비법 개정안도 처리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간 재개발사업 시행자도 용적률을 최대 1.3배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이 민간 재개발사업 시행자에 용적률을 1.2배까지 상향하도록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이후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과 서울시 사이 논의를 지켜보기 위해 합의 처리는 무산됐다.

복 간사는 “본회의에 계류 중인 도정법은 국민의힘 국토위 간사에게 수정안으로

냈던 민간 사업자에게도 용적률을 1.2배로 높이는 안을 제안했는데도 야당에서 답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기다리긴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법안 처리 시기 때 최대한 빨리 조속히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처리해서 서울과 수도권에 막힌 공급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도 주요 당정협의 내용이었다”고 강조했다.

복 간사는 도시정비법 개정안 처리 시점을 두고 “예산 심의 끝나고 나서 법안 처리 시점이 올 것”이라며 “국토부가 서울시와 대화를 해야 한다며 두 차례 연기한 것인데, 그런 노력을 했는데도 진행되는

것이 없다고 하면 저희들이 정한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민주당 수정안이 결코 일방적이지 않다”며 “국민의힘은 일정 정도 가격 상승 우려가 있음에도 민간 용적률 1.3배를 요구하고 있는데, 1.2배로 올리는 것도 의미 있다. 서울시도 1.3배로 올렸을 때 교통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우려스럽다고 했다”고 말했다.

복 간사는 도시정비법 개정안 추진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까지 가지 않을 것 같다는 것이 저희들이 느끼는 공기”라고 표현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앞서 당정협의 공개발언에서 “국토 균형 성장도 본격화 하겠다”며 “국정 운영의 중심은 세종으로, 미래 산업의 기회는 지역으로 넓혀겠다. 행정수도를 완성하고 기업의 투자 일정을 맞춰서 필요한 산업 용지를 공급하겠다”고 했다.

또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국민주권정부 2년차인데, 계획보다 실행에 집중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어야 할 때”라며 “무엇보다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야 한다. 대통령께서도 주택 공급의 전격전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pth7285@metroseoul.co.kr



metro

가상자산 과세 유예 두 달 앞두고 결론 ‘보류’ 선관위 투표용지 검증 중단·재개 반복

과세 인프라·해외 거래소 형평성 변수
쟁점 사안 점검한 후에 판단하기로

당정이 28일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상자산 과세 유예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만났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쟁점 사안을 점검한 후에 판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겠다는 목소리가 당 내부에서 힘을 얻고 있어서 당이 이미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추측도 나온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위원회 여당 간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 과세 유예 관련 당정협의회 후 기자회견과 만나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공감하지만, 국내 과세 형평성과 시장의 변화에 따른 체계 정비 필요하단 의견이 좀 있었다”고 말했다.

오 간사는 당정협의에서 ▲디지털자산 기본법 입법 및 시행 시기 ▲해외 거래소 과세 정보 확보 ▲가상자산 파생 금융상



당정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가상자산 과세 당정협의회를 열고 국민적 우려와 제도적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살펴 과세 유예 여부를 결론 내리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박태홍 기자

품 위치 설정 ▲손실이월공제 허용 문제 ▲거래소 별 과세 시뮬레이션 위한 정보 확보 등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내년 1월1일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국민적 우려와 제도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살펴 과세 유예 여부를 결론 내려야 한다는 점을 정부에 전달했다.

김 대표는 공개 발언에서 “가상자산 과세는 ‘소득이 있는 곳에 합당한 과세가 이루어져 된다’라는 원칙에 비춰서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로서 꼭 해 왔던 과

제”라며 “동시에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적 기반이 될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아직 제정이 되지 못한 상황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는 “가상자산 시장의 특성과 거래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가 시행될 경우에 혹시 납세자의 불신과 혼란이 있지는 않을까, 과세 인프라의 미비, 또 해외 거래소와의 형평 문제를 포함해서 자산 형성의 기회를 모색해 온 청년들의 우려는 어떻게 경청하고 또 반영해야 하는지 등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박태홍 기자

6·3 지방선거 사태 공개 검증
촬영 허용 범위 놓고 여야 충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에 대한 공개 검증이 28일 생중계 여부를 둘러싼 갈등으로 중단됐다가 녹화 중계에 합의하면서 3시간여 만에 재개됐다. 현장을 찾은 여야 의원들은 철저한 검증을 한 목소리로 요구하면서도 더불어민주당은 객관적 증거에 따른 의혹 해소와 장기 점거 사태 종식에, 국민의힘은 참관인의 권리 보장에 방점을 찍었다.

이날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의 공개 검증에는 민주당 추천 인사 45명, 국민의힘 추천 인사 40명, 조국혁신당 추천 인사 5명,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직원 6명 등 총 96명이 참관 인원 포함됐다.

특검팀은 검사와 특검보 등 가용 인력 110명 이상을 투입해 공개 검증 전반을 총괄했다. 선관위 인력 약 500명도 검증 작업에 나섰다. 검증 대상 투표용지는 약 247만 장이다.

검증은 촬영 허용 범위를 둘러싼 이견으로 한때 중단됐다. 이 특검은 현장에 CCTV와 책상별 영상 촬영 장비가 설치돼 있다고 설명하며, 원활한 절차 진행과 보안 등을 이유로 참관인의 개별 촬영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참관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해당 투표지를 별도로 분류해 촬영하고 증거를 수집하겠다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 측 참관인은 “오늘 검증에서 참관인의 촬영이 불허된다면 이견 국민적 열망과 알 권리에 완전히 배치되는 일”이라며 촬영 허용을 요구했다. 김민수 최고위원도 “녹화 촬영을 못 하게 하는 게 맞는다”며 “조율을 해달라”고 했다.

결국 특검팀은 녹화 중계를 위한 방송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국민의힘 검증참관인이 28일 오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에서 열린 선관위 특검 올림픽공원 현장 검증에서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에게 항의하고 있다. /뉴스1

사 촬영을 허용했다. 참관인의 개별 촬영은 불허하되, 여야 참관인 각 1명에게 촬영 장비를 지급해 촬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검증은 중단된 지 3시간여 만에 재개됐다.

특검 측은 “이상 투표지가 발견되더라도 개별적으로 참관인이 촬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구호를 외치거나 특검의 요청에 불응할 경우 퇴장 조치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번 검증의 목적이 선거 결과를 다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제기된 의혹을 사실과 증거로 확인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중단되거나 지연된 사태를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명백한 선거관리 부실”이라며 “어떠한 외압이나 정치적 고려 없이 객관적인 사실과 증거에 따라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혹 해소를 위한 철저하고 공정한 검증 ▲현장의 안전과 질서 확보 ▲장기간 이어진 점거 사태 종료 ▲선거관리 체계의 미비점 보완 등을 요구했다.

/박경수 기자 gws0325@

李 대통령 “안전은 국가의 핵심 책임”

이태원 참사 4주기 앞두고 안전점검

이재명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4주기를 하루 앞둔 28일 “우리가 겪은 지난 모든 참사와 재난에서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제대로 지켜 주었는가, 또 피해자와 가족들은 충분히 보호받았는가에 대해서 늘 뼈아프게 반성해야 한다”며 국가의 안전 책임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10·29 이태원참사를 언급하며 이 같이 밝혔다.

대통령 소속 국민생명안전위원회는 부처별로 나뉜 생명안전 정책을 통합적으로 점검하고 조정하기 위해 지난 7월28일 출범했으며, 국민의 안전권을 높이기 위한 국가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최상위 기구다. 위원장은 대통령이 맡으며, 공동 부위원장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백종우 경희대 교수다. 이날 회의는 오는 12월3일부터 시행되는 ‘생명안전기본법’을 통해 명문화된 ‘국민 안전권’ 및 피해자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분야별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이전과 이후

에도 분명히 막을 수 있었던 죽음과, 또 살릴 수 있었던 생명은 여전히 많다”며 “오늘의 포어처럼 ‘오늘도 무사히’라는 말은 이제 이 나라의 핵심적인 책임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안전은 다른 누가 지켜주는 것이 아닌 스스로 지켜야 되는 것이었지만, 이제는 경제가 성장하고 나라가 발전해도 일터에서 목숨을 잃고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보다 우선할 가치는 없다”며 “‘돈보다 생명을’이라는 구호를 쓰는 단체들도 있는데, 이게 정말로 중요한 가치가 아닐까 싶다”고 강조했다.

/서예진 기자 syj@